

**『인도-태평양과 일대일로 속의 한반도』
-사업결과 보고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1. 사업 배경

□ 개요

- 사업명: 인도-태평양과 일대일로 속의 한반도(Korea at the Crossroads: Indo-Pacific Strategy vs. One Belt, One Road)
- 기관명: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2019년 다시 교착 상태에 접어든 북미회담 및 남북미 관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신남방정책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하고 진행할 필요가 대두됨.
- 이를 위해 공간 차원에서도 보다 거시적인 지리정치 및 지리경제적 관점이 요구됨. 즉, 좁은 의미의 동북아뿐만 아니라 미국이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라는 광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질서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경쟁과 협력의 틀을 제대로 이해할 때 중장기적 안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가 경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국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입체적 해석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나, 이러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임.

○ 목적

- 인도-태평양이라는 공간과 신남방정책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외교다변화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위치와 영향, 역내 질서와의 상호작용을 국제안보, 한반도 역사, 정치경제, 지역협력 등의 복합적 차원에서 고찰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대해 새롭고도 다양한 대안과 시각을 제공함.
- 지역 차원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역내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폭넓고 격렬하게 세계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경쟁 및 지정학적 변화가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

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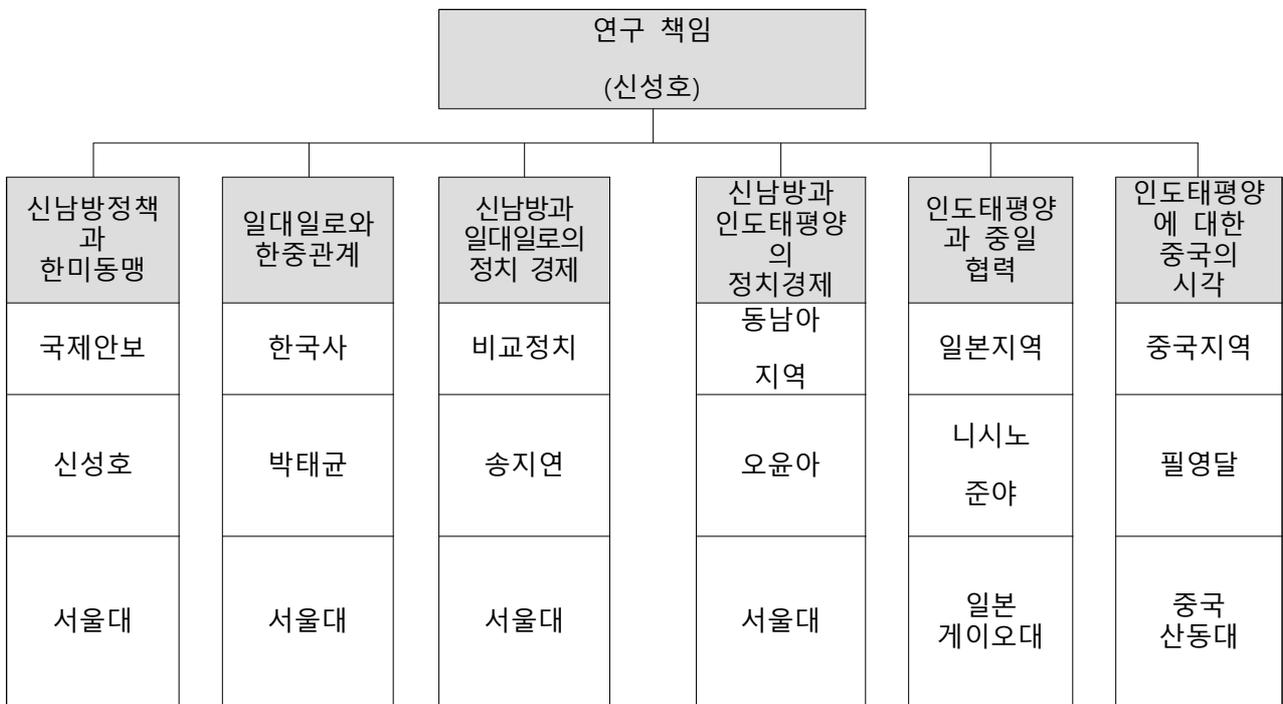
- 특히 에너지원 및 수급 경로 다변화, 정보통신 및 AI 기술 발달로 인해 기존 세력구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 그리고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국 정부의 외교다각화 노력을 고려하여 이러한 움직임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미칠 국제 및 거시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전망함.
- 한반도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신 전략 및 이에 따른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조망하고, 과거 한반도 역사를 재고찰하여 새로운 질서 전망을 위한 사례로 분석한 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동학을 이와 비교함으로써 복합적 해법을 모색함.
- 또한 인도-태평양 시대에 한반도가 가지는 특수성과 의미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을 재해석하고 역내 정치/군사/경제적 요소를 조명하는 학제적이고 복합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함. 즉,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단순히 동북아 안보만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나아가 세계 전체의 정치·경제·사회 변동을 인식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각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여 미래적 대안을 제시함.
- 아울러 동북아의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에만 천착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도-태평양이라는 관점 하에 신남방정책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현황 및 동북아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함.
- 학술적 측면에서, 평화체제를 전망하는 데에 있어 시간적, 공간적으로 단편적이고 지엽적이었던 기존의 분석틀을 복합적으로 전환시키고, 학제적 연구 대안을 제공함.
- 정책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지리적 공간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요소 및 한계점을 제시하는 등 평화 체제의 안정적인 구축과 한반도 미래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함.
- 무엇보다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비하여,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환경 변화 외에도 한반도가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본 연구에 참여하는 공동 연구원들이 인도-태평양 전략 및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하여 국제안보, 한국사, 지역협력, 비교정치 등의 분야와 관련한 아래의 연구를 수행하였음.

○ 추진 체계



○ Covid-19로 인해 당초 계획되었던 해외 현지 전문가의 간담회(일본, 중국 각 1회)를 온라인 화상 회의로 대체하고 공동학술회의 또한 화상 회의로 실시함.

○ 전년도부터 지속된 연구를 통해 구축 중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자 풀(pool)을 확장하여 향후 보다 다양한 연구를 위한 플랫폼으로 구축하였음.

□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2002. 3. 15.	착수회의
2020. 5. 17.	1차 점검회의
2020. 7. 15.	2차 점검회의
2020. 11. 9.	연합학술대회 준비 회의
2020. 12. 2.	연합학술대회 결과 정리 및 후속 1차 회의
2020. 12. 18.	연합학술대회 결과 정리 및 후속 2차 회의
2020. 12. 21.	연합학술대회 결과 정리 및 후속 3차 회의
2021. 1. 7.	최종보고 제출 준비 1차 회의
2021. 1. 8.	최종보고 제출 준비 2차 회의
2021. 1. 14.	최종보고 준비 자문회의 1차(중국 워크숍 대체)
2021. 1. 14.	최종보고 준비 자문회의 2차
2021. 1. 15	최종보고 준비 자문회의 3차(일본 워크숍 대체)
2021. 1. 20	최종보고 이후 후속조치 1차 회의
2021. 1. 22.	최종보고 이후 후속조치 2차 회의

□ 참여 인력

○ 책임자

성 명	대 학	학 과	직 급
신 성 호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 수
연구소(원)	구 내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국제학연구소	5810		ssheen@snu.ac.kr

○ 주요 참여 인력

성명	소속	직급	이메일
신성호	국제대학원	교수	ssheen@snu.ac.kr
박태균	국제대학원	교수	tgpark@snu.ac.kr
송지연	국제대학원	교수	jiyeoun.song@snu.ac.kr
오윤아	국제대학원	조교수	yoona.h@snu.ac.kr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nishino@law.keio.ac.jp
필영달	중국 산둥대학	교수	biyingda@sdu.edu.cn

3. 사업 성과

□ 사업 성과

- 20. 3. 15. 착수회의
 - 온라인으로 착수회의 진행. 향후 일정 및 저자별 연구 방향 공유
- 20. 5. 17. 1차 점검회의
 - 원고 진행 상황 확인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일정 및 계획 변경 논의
- 20. 7. 15. 2차 점검회의
 - 상반기 연구 결산 및 원고 내부 중간 발표
 - 해외 워크숍 취소 가능성 및 대체 방안 논의
 - 해외 전문가 자문 및 연구 진행 상황 확인
- 20. 11. 9. 연합학술대회 준비 회의
 - 11월 26일로 확정된 연합학술대회 온라인 발표 프로그램 확정
 - 원고 작성 및 연구 진행 현황 확인
 - 해외전문가 자문 섭외 진행 현황 확인
- 20. 12. 2. 연합학술대회 결과 정리 및 후속 1차 회의
 - 연합학술대회 중 개별 연구자 관련 코멘트 정리 및 대응 방향 발표
 - 연합학술대회 관련 내부 상호 의견 교환 및 제안
 - 최종보고 원고 작성 및 연구 방향 논의

- 20. 12. 18. 연합학술대회 결과 정리 및 후속 2차 회의
 - 연합학술대회 중 개별 연구자 관련 코멘트 정리 및 대응 방향 발표
 - 연합학술대회 관련 내부 상호 의견 교환 및 제안
 - 최종보고 원고 작성 및 연구 방향 논의
- 20. 12. 21. 연합학술대회 결과 정리 및 후속 3차 회의
 - 연합학술대회 중 개별 연구자 관련 코멘트 정리 및 대응 방향 발표
 - 연합학술대회 관련 내부 상호 의견 교환 및 제안
 - 최종보고 원고 작성 및 연구 방향 논의
- 21. 1. 7. 최종보고 제출 준비 1차 회의
 - 최종보고 제출 전 연구 결과 내부 발표(박태균, 신성호)
 - 최종 수정 사항에 대한 내부 연구자 코멘트 및 의견교환
- 21. 1. 8. 최종보고 제출 준비 2차 회의
 - 최종보고 제출 전 연구 결과 내부 발표(송지연, 오윤아)
 - 최종 수정 사항에 대한 내부 연구자 코멘트 및 의견교환
- 21. 1. 14. 최종보고 준비 자문회의 1차(중국 워크숍 대체)
 - 최종보고 제출 전 외부 전문가 검토(필영달)
 - 외부 전문가 관련 연구 진행 상황 확인 및 의견 청취
 - 최종 수정 사항에 대한 외부 전문가 코멘트 및 의견교환
- 21. 1. 14. 최종보고 준비 자문회의 2차
 - 최종보고 제출 전 외부 전문가 검토(박영준)
 - 외부 전문가 관련 연구 진행 상황 확인 및 의견 청취
 - 최종 수정 사항에 대한 외부 전문가 코멘트 및 의견교환
- 21. 1. 15. 최종보고 준비 자문회의 3차(일본 워크숍 대체)
 - 최종보고 제출 전 외부 전문가 검토(니시노 준야)
 - 외부 전문가 관련 연구 진행 상황 확인 및 의견 청취
 - 최종 수정 사항에 대한 외부 전문가 코멘트 및 의견교환
- 21. 1. 20. 최종보고 이후 후속조치 1차회의
 - 최종보고 제출 이후 미흡한 부분 및 향후 보완 사항 논의
 - 향후 계획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
 - 2021년도 연구사업계획 관련 논의

○ 21. 1. 22. 최종보고 이후 후속조치 2차회의

- 최종보고 제출 이후 미흡한 부분 및 향후 보완 사항 논의
- 향후 계획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
- 2021년도 연구사업계획 관련 논의

○ 국제안보 분야: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 미중경쟁의 심화 속에서 미국은 최근 천명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천명하면서 주요 위협과 주요 동반자를 새롭게 정의함. 이 과정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된 동반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이것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노정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발생함. 이에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에게 주어진 전략적 선택과 한미동맹에 미치는 의의를 고찰함. 첫째,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의 상관성. 두 정책이 가지는 경제, 외교, 국제법적 의미를 넘어서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함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혹은 부합하지 않는지의 살펴봄. 둘째,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식 입장과 이것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전략적 함의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도, 호주, 동남아 주변국의 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한반도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봄. 셋째,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이것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이것이 미중경쟁의 구도 속에서 한국의 장기적인 국가안보전략에 가지는 함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

○ 한국사 분야: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 최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동남아시아에서 큰 호응을 일으키고 있음.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자국의 경제 주권 및 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동남아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이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음. 한편으로 중국은 신남방정책이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면서도 오히려 인도-태평양 전략과 결합하면서 자국의 이권을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학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중국 학자들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정리, 분석하고 이를 한국 정부의 실제 정책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나아가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함.

○ 비교정치 분야: 송지연 (서울대 국제대학원)

- 한국이 지난 2017년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3P를 기반으로 한-아

세안 및 인도와의 경제 및 안보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 신남방정책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접점이 있음에도 연계나 협업 가능성은 미지수인 상황임.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동남아 및 서남아에서 갈등 혹은 경쟁할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전략 및 신남방지역 대상의 경제관계 분석을 통해 일본의 안보와 대외경제정책을 검토함. 특히 중국의 부상과 세력 확대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역내 질서안정과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과 투자정책 연계를 살펴봄.

○ 동남아시아: 오윤아 (서울대 국제대학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성의 공통적 대상지역으로서 동남아시아의 기본 입장과 전략, 과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함. 특히 2019년 6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이 제시하는 포용적 지역질서와 경제협력, 해양협력은 미중의 거대 전략에 대한 아세안의 공식적 응답이라 볼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입장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의 경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검토하고 동남아시아의 대응을 국가별 차원과 아세안 전체 차원의 두 차원에서 분석함. 특히 아세안의 AIOP가 안보보다 경제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점에 주목하여 동남아와 미국, 동남아와 중국의 무역, 투자, 기타 경제 관계의 성격과 최근 변화 양상을 비교 고찰함. 이 과정에서 주요 국가별 쟁점과 구조적 차원에서 아세안 외교의 쟁점 또한 연구함.

○ 일본지역: 니시노 준야(일본 게이오대학)

-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동기를 분석하고 이것이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제안자로서 적극적인 지지와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다양한 견제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음. 즉, 정치적으로는 서방 세계와의 가치 공유, 안보적으로는 남중국해 항행자유와 안전 확보를, 경제적으로는 AIIB 가입 대신 ‘아시아 인프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국에 대한 헤징 전략을 취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과연 이러한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것이 전략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지역에서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대효과와 실제 효과를 비교 분석함.

○ 중국지역: 필영달(중국 산둥대학)

- 인도-태평양 개념과 전략의 형성과정 및 성격을 살펴보고,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인해 중일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도전과제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지 고찰함.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 표명과 이에 대한 중국의 높은 경각심이 양국관계에 미친 영향을 증점적으로 살펴본 후, 전략, 전술, 세계질서 및 양국 호혜의 네 가지 차원에서 양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함.

□ 관련분야 기여도

- 기존 연구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한반도의 현재에만 치중함으로써, 지역적, 지구적, 역사적 맥락 하에 미래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를 진행하는 보다 복합적인 전략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특히, 인도-태평양 질서의 태동과 한반도 문제의 접점을 찾는 최신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 안보 환경 변화, 한반도 역사적 접근, 정치 경제, 기존 지역 협력 사례, 주변국 인식 등 학제적 분석을 통해 미래적 대안 제시에 차별화를 도모함.
 - 연구진에 일본과 중국 학자들 뿐만 아니라 역사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음.
 - 정치학 분과학문 내에서도 안보, 정치경제, 비교정치와 같은 다양한 하위분야를 포괄하여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질서 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향방 및 평화체제의 성격과 구축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타당성이 높은 논의를 진행하였음.
-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자들을 연구진에 포함하여 사업기간 중 온라인으로 긴밀한 교류를 통해 학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일본의 게이오대학(慶應義塾), 중국의 산둥 대학(山東大學), 그리고 한국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를 전망하는 국내외 학자 그룹을 과거 연구 네트워크에 포함시키고, 향후 관련 연구과제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확장하였음.
- 지정학 및 세계패권 경쟁과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반영하여, 동아시아에서 미-중관계의 변동이 끼칠 영향을 전망하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도출하였음.
 - 평화체제 관련 새로운 분석의 결과를 집대성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4. 예산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트럼프 대통령 퇴임 및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행정부에 변화가 있음에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변함없이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코로나-19 사태 여파와 무관하게 일대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간의 경쟁이 한반도 대내외에 미칠 영향은 당분간 상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이 지향한 목표는 타당하였음.
- 또한 본 사업은 미-중 갈등을 인-태 전략과 일대일로의 경쟁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정에서 입체적인 해석과 시각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분과학문 및 국적의 연구진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따라서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인적 구성 및 과제 구성 등은 한반도 현안 및 세계정세에 비추어보았을 때 시의적절하였으며, 본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음.

○ 사업의 효율성

-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기획을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단편적, 부분적인 접근의 한계를 벗어나 두 전략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이 동학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였음.
- 한중일 전문가 기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전략 및 일대일로 기획 연구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자 협업집단을 확대하였음.

○ 사업의 영향력

- 미-중 경쟁 속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질서에 대응하는 최신의 연구를 제시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하는 다학제적 분석방식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 및 일대일로와 관련한 논의를 학계에 소개하고, 확대하였음.

○ 사업의 발전가능성

-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한 연구보고서는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일대일로

관련 연구와의 연계 및 종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북핵문제, 남북 경제협력, 통일논의 등)에 관한 연구와도 유기적 연결을 모색할 여지가 큼.

- 금번 연구를 포함하여 여러 해 동안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화하여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가 한반도 문제에 주는 함의 및 시사점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으로 발전시킬 예정.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연구 성과물 보완 필요

- 2020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전문가 워크숍 및 자료 탐색을 위한 해외 출장이 취소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주제 연구에 필요한 자료 습득 및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발생함.
- 이로 인해 현지 조사가 필수적인 관련 주제 연구 성과물이 당초 계획에 비해 미진한 경우가 발생했으며 해외 전문가와의 원활한 교류와 공동연구에도 차질이 생겨 예정했던 성과물이 부분적으로만 완성됨.
- 2021년도 사업 주제는 2020년 연구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2021년 사업을 통해 전년도 연구 결과에서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보완, 수정할 예정임.
- 아울러 2020년에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취소된 해외 워크숍 및 서울에서의 학술회의를 2021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전년도에 계획했으나 진행하지 못한 자료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예정임.

○ 성과물 대외 홍보 및 발간 적극적 추진 및 지원 필요

- 유의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와 소재 선정으로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 일반 대중에게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근본적으로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해 연구기간 내에 성과물을 정리, 보완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기 어려운 상황이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됨.
- 지난 2년간의 연구성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연구는 일정을 적절히 조율하여 연구기간 내에 가급적 더 많은 결과물을 투고, 발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 계획

○ 사업의 발전가능성

-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한 연구보고서는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일대일로 관련 연구와의 연계 및 종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북핵문제, 남북 경제협력, 통일논의 등)에 관한 연구와도 유기적 연결을 모색할 여지가 큼.
- 금번 연구를 포함하여 여러 해 동안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화하여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가 한반도 문제에 주는 함의 및 시사점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으로 발전시킬 예정.

○ 2021년 신규 사업과의 연계 및 통합 추진

-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및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동북아 및 세계정세에 도래한 큰 전환과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통일기반구축을 단기적, 미시적 수준에서 협의로 정의하기보다 중장기적 통일기반구축의 관점을 택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서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한-미관계에 천착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심화 연구.
- 2019년과 2020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연구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과연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 변용, 적용될지, 그리고 그 전략이 동북아,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론적,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방향의 대강을 제시.

6. 성과 관련 지표

□ 대표 사업 실적

-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Southeast and South Asia: Strategy for Economic Revitalization and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송지연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투고 후 심사 진행 중, 2021년 1월 11일 기준)

□ 성과 자율 지표

- 사사 논문 게재 예정 4건:
 -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Southeast and South Asia: Strategy for Economic Revitalization and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송지연,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8권 1호 투고, 게재 예정, 2021년 1월 11일 기준)
 - “중국 전문가들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분석 연구” (박태균)

-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정책의 조화” (신성호)
-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경쟁과 동남아시아: AOIP의 의의와 한계” (오윤아)
- 단행본 (예정) 1건: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속의 한반도” (최종원 고를 수정보완하고 2021년 사업 결과물과 종합하여 2022년 중 출간 예정)

7. 연구 결과 요약

□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최근 미중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이것이 한미동맹에 가지는 의미에 대한 국내외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 아베 정부에 의해 시작된 인도-태평양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방일을 계기로 보다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2017년 12월 발간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명시되면서 미국의 새로운 아태전략으로 공식화 됨.
 - 문서에서는 먼저 중국을 경제적 부상과 함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가진 나라로 주목하며 미국이 아태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중국의 지역 장악을 견제하고 지역의 주권과 자주를 보호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제시.
 - 특히 말미에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4자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언급하며, 정치, 경제, 군사의 영역에서 상호적이고 공정한 무역, 법이 지배, 항해의 자유, 국제법에 근거한 영토분쟁 해결,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추구해 나갈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
- 2019년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의 가장 위협한 잠재적 적국으로 공식화하면서 여기에 대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입장에 대한 압력이 심화됨.
 - 미 국방부는 2019년 6월 1일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준비태세, 파트너십과 네트워크화된 지역’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이란 제목의 인도-태

평양 전략 추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중국·러시아·북한 그리고 초국가적 문제를 이 지역의 주요 위협요인으로 규정한 가운데, 특히 최근 중국이 추구하는 gray zone 전략과 경제적으로 일대일로를 통해 지역 국가들을 회유 포섭하여 지정학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견제. 보고서는 중국이 현 질서를 전복하려 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헤게모니(패권)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
-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지역 국가들은 동맹, 전략적 파트너, 지역 (남아시아·동남아·남태평양)의 파트너, 역외 파트너(영국·프랑스·캐나다 등)로 구분.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the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으로, 호주는 ‘미래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 보장을 위한 협력 대상’(collaborating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into the future)으로 언급
- 한편 한국은 인도-태평양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의 축’(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으로 언급하며 한국과 전략적 협력은 북한 문제와 한반도에 국한.
- 이를 두고 국내외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는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 국방부가 인식하는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이는 결국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됨
- 한편 한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식적인 참여나 지지를 선언하는 대신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이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경제 번영과 항해의 자유 등의 원칙을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조화를 강조
- 따라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양립 가능성, 혹은 미중경쟁과 한미동맹의 갈등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대안 모색이 매우 필요. 이를 통해 한국의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미중 사이의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한미동맹에 가지는 의미를 고찰함.

- 첫째,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의 상관성. 두 정책이 가지는 경제, 외교, 국제법적 의미를 넘어서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함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혹은 부합하지 않는지의 살펴봄
- 둘째,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식 입장과 이것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전략적 함의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도, 호주, 동남아 주변국의 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이러

한 중국의 입장이 한반도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봄

- 셋째,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그리고 이것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이것이 미중경쟁의 구도속에서 한국의 장기적인 국가안보전략에 가지는 함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

□ 중국 전문가들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분석 연구: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최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동남아시아에서 큰 호응을 일으키고 있음. 2019년 12월 호치민 대학에서 열린 한국학대회의 주요 발표내용은 모두 신남방 정책을 주제로 하고 있음.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하여 기대를 하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임. 특히 베트남과 같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자국의 경제적 독립을 훼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학자들은 2019년 7월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음. 이 토론회에서 학자들은 신남방 정책이 일대일로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신남방 정책이 미일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판단됨.
- 실제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미일동맹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이 없으며, 한국의 무역대상국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임.
-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인식의 차이는 양국이 향후 동남아시아에 대한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양국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주로 중국 학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학자들이 갖고 있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임.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갖고 있는 내용과 중국 학자들의 인식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
- 경우에 따라 갈등의 극복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기도 함.
- 이를 위하여 2020년을 통해 중국의 주요 한국학 연구 및 교육 대학(상해 후단대학, 위해 산둥대학, 길림 연변대학)을 방문하여 학자들을 인터뷰하고, 2020년 전 중국 한국학대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해내었음. 첫째로 사드 이슈가 한중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의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의 변화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둘째로 한미동맹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결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음
- 셋째로 남북관계와 북중관계는 한미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
- 넷째로 문재인 정부와 한국 언론에 대해 과거보다 깊이 있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음. 과거에 비하여 한국에 대한 연구가 더 깊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중국 유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서로 간에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 결과로 판단됨.

□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Southeast and South

Asia : 송지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세안 국가(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순방 중 발표한 신(新)남방정책은 아세안 및 인도와 교류·협력을 5년 내에 미·중·일·러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남방정책의 특징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한국의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의 대상으로 이 지역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과 인적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한 이해 증진과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상징.
-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과 상생번영(prosperity)을 통한 한-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와 안보 관계 강화에 중점. 특히 사드분쟁과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요인으로 높아지고 있는 중국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세안이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적 측면이 강조.
- 반면 안보를 다루는 평화(peace)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지지 확보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상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와 과제에 머물러 있음.
-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관계 중심의 신남방정책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인도와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과 안보관계에서 접점에 있으나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과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및 동중국해·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아세안 투자전략과 충돌 가능성이 높음. 특히 아세안과 인도는 일본이 전후 경제 및 지정학 요충지로 강조해오던 지역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크게 중첩되면서 경쟁과 갈등의 가능성이 높음.

- 한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은 아세안에 상당히 오랫동안 대규모의 해외투자자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음.
 - 한국은 베트남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는 크게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한 축인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이해와 국가전략 역시 필요함.
- 일본이 주도한 인도-태평양 (Indo-Pacific) 개념은 2007년 아베 신조 총리가 언급한 “두 해양의 합류(confluence of the two seas)”와 외무 대신 아소 타로가 주장한 “자유와 번영의 호(Arc of Freedom and prosperity)”에서 공식화
-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2016년 8월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제시 (정구연 외 2018; 최희식 2018)
 - 인도양과 태평양 두 대양을 매개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을 연결하여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
 - 인도-일본-미국-호주로 이어지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
 - 중국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해양지배 강화와 해양 주변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확대를 견제 및 우려
-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1월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지역적 개념을 수정하였고 전통적인 동맹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포함 및 인도와 호주를 주요 협력국으로 명시 (신성호 2018: 12-13).
- 결론적으로 일본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개발 협력에 참여하였으나 ODA 헌장 수립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규범에 합치하기 위해 노력을 병행함.
- 그러나 일본 국내의 정치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이러한 방향성은 큰 변

화를 겪음.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개발협력에서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는 경향은 더욱 심화됨.

- 따라서 일본의 개발원조 및 개발협력, 특히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의 개발원조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은 정치적 고려, 경제 이익, 규범과 가치 등 여러 차원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왔으며 단선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이러한 핵심 이익의 다면성을 고려할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

□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경쟁과 동남아시아: AOIP의 의의와 한계: 오윤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동남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공통적 대상 지역으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패권 경쟁이 전개되는 주요 무대임.
-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미중 패권경쟁의 성격을 이해하고 향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비록 중소국가들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가지는 기본 입장과 전략, 과제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함.
- 동남아는 중국의 부상 이전에는 선발국 중심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안 보질서와 세계경제질서에 편입되어 성장과 상대적 안정을 누렸고, 이후 후발국들도 선발국들의 모델을 대체로 모방
-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투자와 거대한 내수시장 접근의 기회를 주지만 영토분쟁을 포함한 중국의 지정학적 야심과 공세적 행동으로 인해 동남아에서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대한 의구심 존재
- 기본적으로 동남아는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개방 이후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되, 경제는 중국에 (표면적으로) 상당부분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동남아 선발국의 경우 중국의 해외투자과 인프라건

설 역량, 중국내수시장 접근 기회는 매우 강력한 매력이며 후발국의 경우에도 성장의 도약을 위해 중국은 중요

-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서 동남아는 개별국가 차원과 아세안(ASEAN)으로 대표되는 지역수준에서 중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해왔으나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그 실효성이 의심되어 왔음.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동남아를 해양실크로드의 대상으로 하여 경제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2013년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또는 전략은 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후 두 전략의 경쟁적 구도가 심화
-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은 2019년 6월 방콕에서 개최된 34회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을 발표함.
- AIOP는 특정 국가 배제를 거부하고 포용적인(inclusive) 지역질서를 강조하며 경쟁이 아닌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협력분야로 해양협력, 연계성,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2030, 경제협력을 제시하여 안보 보다는 경제분야를 강조
- AIOP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의 공식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양전략에 큰 관심이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도적으로 작업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입장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경쟁구도를 검토하고 동남아의 대응을 개별국가와 아세안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
 - 아세안의 AIOP가 논의의 축을 안보에서 경제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점에 주목하여 동남아와 미국, 중국의 무역, 투자, 기타 경제관계의 성격과 최근 변화를 재검토
 - 주요 국가별 쟁점과 구조적 차원에서 아세안 외교차원의 쟁점에 대해서도 연구
- AOIP는 급진적 변화 없이 기존 아세안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정책제안은 하지 않음. AOIP는 지역협력에서 (1)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재천명하고 (2) 연계성의 연계(connecting the connectivities)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 경쟁중인 다양한 지역협력 이니셔티브를 아세안 주도로 조율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임.

- AOIP는 미중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중에 지역협력 논의에서 아세안의 현재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동시에 이는 현재의 불안한 미중경쟁구도를 봉합하는 미봉책이며, 오히려 아세안이 현 상황 타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보여줌.
- 현재 미중경쟁구도를 본격화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동남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초기에 일부에서 우려했듯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 주도의 거대한 동남아 경제권이 구축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채무함정(debt trap) 위험성과 공사를 위한 중국 노동자 이주에 따른 현지주민과의 갈등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나, 동남아에서도 일대일로의 평판이 긍정적이지만은 않고 중국의 경제력 영향력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하다는 점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에게는 부담.
-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2013년 발표 이후 실제 사업이 시행되면서 협력국에서의 수용과 사업의 성격이 변화했음을 의미. 그러나 역시 아세안이 이 과정에 수행한 역할이나 영향력은 미미.
- AOIP는 동남아에서 중국이나 미국이 지역협력구상을 시행에 옮길 때 아세안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아세안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아세안 제도를 개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도적 안정성 또는 보수성을 재확인. 지역통합을 주도하고자 하는 아세안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수사와 이행의 간극”(rhetoric-action gaps)은 AOIP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인도태평양전략과 중일협력: 중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필영달 (중국 산둥

대학)

○ 인도태평양 전략 형성 과정 및 그 성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인도태평양’이란 개념은 2007년 인도 방문 중의 일본 아베 총리에 의해 제기되었다. 인도 방문의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자유적, 개방적 인도양-태평양”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2016년 아베 총리는 ‘인도양-태평양 전략’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였다.
-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오바마 시기의 ‘아태균형전략’을 ‘인도태평양전략’으로 확충·발전시켰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2017년 12월 발간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공개적으로 확정되었다.
- 2018년부터 인도태평양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5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이름 바뀌었다.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를 공식으로 발표하였다.
-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 등 문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격, 목표 등을 밝히고자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세력 신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등 동맹국과 우방 국가들을 주역으로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 일본이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며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그리고 일본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이 제안자로서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추진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우선, 정치적으로는 일본이 ‘서방세계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유 민주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인도, 호주 등 ‘가치 공유’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
- 그리고 안보적으로는 일본이 남중국해의 항행자유와 안전을 확보를 위해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국의 군함을 해당 해역으로 파견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해양 분쟁을 벌이고 있는 관련국들의 입장에 대해 가림없이 지지한다. 이와 동시 ‘중국위협론’을 부각시키고 미국, 인도, 호주과 소위 ‘新4개국 동맹’을 촉진해 오고 있다.
-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해 헤징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제안, 추진하고 있는 AIIB에 가입하지 않고 반면에 1100억 달러 투자 규모로 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계획’을 따로 설립하고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주변 국가 간의 합작 프로젝트에도 개입하고 중국과 공개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추진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핵심은 자국의 경제대국 지위 유지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의 강대국 지위 취득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부상을 바라지 않는 국가들과 함께 對중국 견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 질서의 조정 및 재편 과정에서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자 한다. 물론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는 데 국내 정치적, 경제적 고려도 없지 않다. 즉 일본 사회 발전의 보수화 분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 인도태평양전략 하에 중일관계가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여기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중일관계 발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찰하기도 한다.

-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중국이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높은 경계심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해징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전략에 저극적 자세를 보이는 일본에 비판을 가하면서 강경대응 조치도 취해 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국과의 치열한 전략적 경쟁 와중에 일본에 대해 어느 정도에 유화적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對중국 관계 완화정책을 동시 추진한다. 2017년 이래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중일관계는 미국의 아태균형정책 시기에 비해 현저히 완화되어 왔다. 여기서 정치, 경제, 인적 교류 등 측면에서 중일관계 변화 상황을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 중일관계 완화의 원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우선, 안보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은 조어도 분쟁을 비롯한 여러 요인 영향으로 위기 상태로 갔던 양국관계가 더 이상 악화해서 안 된다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위기 관리의 인식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데 접점을 찾아냈다.
-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중일 양국이 많은 공동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중일관계 완화에 저극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 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 주의’ 하에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으로서의 일본도 많은 부담과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의 무역보호주의, ‘동맹협박’ 정책 등으로 아시아 지역은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나 중국에게 아주 중대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일 양국이 관계를 완화시킴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나온 도전과 불안감에 대응하는 것이다.

○ **향후 중일협력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 전략적 차원에서 중일 양국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차원, 다채널의 소통을 통해 상대방 전략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등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양국간 공감대 형성의 바탕이라고 본다.
- 현실적 관계 관리의 차원에서 중일 양국은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양국관계를 계속 관리해야 한다. 기존의 분쟁 분야에 대해서 보다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불안정 요인들을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질서 구축 차원에서 미국발 무역보호주의 및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일 양국은 다자주의적 질서를 유지, 보완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중일한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아세안+3, RCEP 등 다자적인 협력 틀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동이익 증진의 차원에서 중일 양국은 해회시장 공동 개척에 계속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로섬 게임을 모면하고 win-win 협력 관계를 확대시킨다. 이것은 중일 간의 신뢰 증진에 효과적이다.

□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니시노 준야 (게이오 대학)**

- 2021년 1월, 스가 요시히데 수상은 취임 후 첫 국회에서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미일동맹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전임이었던 아베 신조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의 중심적 아젠다(agenda)였던 FOIP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의사를 표명하였다.
- FOIP는 2016년 8월 케냐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개발 회의(TICAD)의 연설에서 아베 수상이 내건 구상이다. 아베 수상은 이 연설에서 현저한 경제 성장을 보이는 아시아와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를 두 개의 바다(태평양과 인도양)로 이어, 지역 전체의 경제 발전을 지향할 것을 제창하였다.
- 미국의 트럼프 정권 역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목표로 삼게 되면서, 미일 양국이 함께 FOIP를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한편,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 한국이나 ASEAN 국가들은

FOIP에 소극적 혹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트럼프 정권이 중국과의 대립을 한층 심화하는 가운데, 그러한 경향은 더욱 현저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2020년 봄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빈으로 일본에 방일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에서 보여지듯, 현재 일본은 중국에 대항하기보다도 협력을 추진하는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알려져 온 FOIP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금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FOIP의 기원과 초기 전개 과정에 대해서 검토한후, 중일관계의 추이에 따라 FOIP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분석했다. 특히 2012년 12월에 발족한 제 2 차 아베 내각이 추진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FOIP)의 기원, 전개, 그리고 현주소를 분석했다.
- 결론적으로 FOIP의 기원은 제 1 차 아베 내각이 내건 ‘자유와 번영의 호’에 있으며 따라서 중국에 대한 대항을 강하게 의식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6년 아베 수상 연설을 거쳐 FOIP의 3개의 축이 정리 될 무렵에는 중일관계의 개선, 미중 대립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지역 내 각국의 의향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여 FOIP는 ‘대중전략’이라기 보다는 ‘지역협력구상’으로 변화하였다.
- 스가 내각은 이러한 전략의 지속을 천명하였으나 코로나 대책 등 국내 문제에 때문에 활발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지 못하다. 한편 중국은 강권적인 방법으로 재빠르게 코로나 재난에서 탈피하여 ‘마스크 외교’, ‘건강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활발한 외교 활동과 일본 국내의 악화된 대중국 인식 (코로나와 홍콩 문제, 센카쿠 주변에서의 중국의 활동에 의한)이 FOIP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2021년 1월에 발족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일본의 FOIP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